민주당, 이번엔 '인터넷 투표' 논란

혁신과통합위, 광역단체장 경선 도입 추진

일부선 "부정선거·투표자 연령 편중" 반발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 인터넷 투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인터넷 투표 경선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이재명 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국민 경선에서 모바일투표 외에 인터넷 투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광주와 인천 등 광역시의 경선 방식과 관련, "인터넷 투표를 포함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시민공천배심원제 가운데 국민적 여론에 부합하는 방안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투표 도입은 부정선거 가능성과 투표자 연령 편중 논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실제 전면 도입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과 혁신위가 설익은 경선 방안 등을 제시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공정성 확보 문제도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부정 선거에 이용될 수 있는 인터넷 경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이어 인터넷 투표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국민적 흥행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터넷 투표는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도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공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고 준비성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인터넷투표의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모두 끝낸 상태"라고 말하고, "선거권자의 연령과 성향의 편중 문제 등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찬반 격론도 벌어지고 있으며 보정 방법으로 일부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묘지 찾은 참여당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참여당 인사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김정일 연내 만날까

지난 10월이후 물밑접촉… 이르면 3~4월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연내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함에 따라 현실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강조한데 이어 "양국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과의 대화' 당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의제로 강조했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정상회담이 성사되거나 회담 성사를 알리는 '극적인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포사격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서 나온 점이다.

북한의 도발로 국내의 대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에서 "올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신년 연설의 기조가 재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아직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한 때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정상회담과 관련한 물밑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시기로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 오는 3~4월께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시점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기념일과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6월 25일 사이에 개최하는 방안과 8·15 광복절을 즈음해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교육의원 선출 방법 이견

교육자치법 개정 무산 위기

여야가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대립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현재 주민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고,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현재까지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직선제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고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며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 불발시 상임위에서 표결처리 하거나 정치개혁특위로 넘기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은 합의처리가 원칙이며 상임위 논의 포기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앞서 한나라당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결국 여당이 물러설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경론으로 돌아서 현재는 양당 모두 2월 1일 개정안 처리 무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임시국회

세종시 특별법 여야 충돌 불가피

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법개혁,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개편 등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전초전 의미도 있어 30일간의 회기 내내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만들기 입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 박근혜)간 계파갈등 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단 친이계는 야당의 공세를 행정비효율 억제, 통일시대 대비,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의 논리로 반박하며 수정안을 적극 옹호할 계획이지만, 친박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사법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에 쐐기를 박는 동시에 민생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4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 실업자 증가 등 정부 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낱낱이 밝혀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 공조를 통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도 적극 검토중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